



3면

세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전환점 맞았다

전주매일

2026년 1월 27일 화요일 (음 12월 9일) 제3905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민주화 거목’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별세

‘평생 민주주의에 헌신’

오늘부터 31일까지 닷새간 기관·사회장 엄수
“남겨주신 발자국 기억할 것”... 정치권 추모 이어져

민주화의 거목으로 불린 고(故)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장사진이 지난 25일 베트남 출장 중 호치민 시에서 갑작스러운 심장질환으로 향년 73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고인의 장례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기관·사회장으로 엄수된다.



고인은 군사독재 시절 민주주의를 갈망하던 청년들의 정신적 안식처 역할을 했다. 사회과학 서적을 통해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전파한 핵심 공간

이었던 민주회의 결실이 맺힌 1988년 제13대 총선에서 36세의 젊은 나이로 국회에 입성한 그는 이후 7선 국회의원을 지내며 입법과 정책의 중심에 섰다. 서울 관악에서 5선을 한 뒤 세종시로 지역구를 옮겨 2선을 더해 7선의 다산 기록을 세웠으며, 국가 균형발전에도 힘을 보탰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고교 평준화 정책을 추진하며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확대했고,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는 국무총리로 임명돼 행정수도 세종시 건설을 이끄는 등 국정 전반을 책임져 책임총리의 전형을 보여준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그를 ‘원칙과 전략을 겸비한 정책형’으로 평가한다. 고인은 새정치국민회의,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민주통합당, 더불어민주당 등 민주당계 정당의 주요 직책을 두루 거쳤으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맡아 제21대 총선에서

180여석에 이르는 의석을 차지 민주당의 압승을 이끌었다. 정계 은퇴 이후에도 민주당의 상임 고문으로 후진 양성과 정치 발전을 위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이 수석부의장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4명의 대통령 당선에 큰 기여를 했다. 지난해 10월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임명돼 취임한 그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크게 헌신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적 비주류였던 시절부터 멘토로서 이재명 대통령 결을 지키며 경선과 대선 과정에서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고인의 위독 소식이 전해지자 조장식 정무특보를 베트남 현지로 급파하기도 했다. 정치권의 추모도 이어지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평생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분”이라며 애도를 표했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역시 “가르쳐주신 대로, 남겨주신 발자국을 기억하며 살겠다”며 애도를 표했다. 국민의힘도 “갑작스러운 비보에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1970년대 유신독재에 맞선 젊은 운동가에서 신림동 광장서적 대표, 7선 국회의원,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이르기까지 이해찬 전 총리의 삶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사와 궤를 같이했다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만호 기자

민주·혁신,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추모 묵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을 추모하며 묵념을 하고 있다. 같은 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최고위원들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을 추모하고 있다.

민선 8기 전북도정 도민 비판·불만 고조

타지역 인사 임명... ‘지역인재 외면’에 직면

첫 비서실장 필두로 공공기관장 인사에도 중용
“도민 정서와 관계없이 임명하는 것, 납득 불가”

민선 8기 전북 도정은 아쉽게도 출범했으나 국책사업을 비롯한 인사문제 등 되는일이 제대로 없다는 도민들의 냉혹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인 대안 마련 및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김관영 지사는 취임이후 실시한 공사 사장 문제로 전북도의회 청문회 인사검증 과정에서 마찰을 빚기도 했으나 끝내 채택을 받지 못한 타지역 인사를 선임시켜 의회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역행했다는 비판을 자초했을 뿐만 아니라 전북 출신들을 외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6일 일부 지역정계 인사들에 따르면 김관영 지사 취임이후 서울 근무와 광주 출신의 타시도 인사를 비서실장 및 핵심직리에 대거 중용하면서 더 큰 밀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느냐는 의혹들이 도민들 사이에서 강력하게 제기돼 왔다는 것이다. 김관영 지사는 보좌진을 비롯한 군산 시민들의 반대를 무릅쓰는 채 민주당 간판을 버리고 안철수 현 국민의힘 의원이 창당한 국민의당에 입당, 고희연 군산에서 국민의당으로 입후보해 재선에 성공한 뒤 바른미래당을 거쳐 이재명 현 대통령의 일괄박차 추진으로 민주당에 재입당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를 뒤받침하듯 민선 8기들어 김 지사는 국민의당 전주 갑 국회의원을 지낸 인사를 초대 정무수석과 경기도 화성시 지구당 위원장을 대변인으로

광주 출신을 비서실장에 임명해 도민들의 정서에는 이렇듯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 준 질타를 받기도 했다. 더구나 김 지사는 전북도정을 이끌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인사에서 실망으로 시작해서 ‘참사’로 끝났다는 비판 여론에 직면하고 있다. 당선인 시절 정치인 출신의 김관영 지사가 당선된 직후 지역사회의 기대는 어느때보다 큰 것도 사실이다. 고시 3관왕이라는 화려한 이력도 이목을 끌었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출신으로서 중앙감과 정치력을 맘껏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였다. 그러나 출범 직후부터 인사 잡음이 첫 비서실장을 필두로 지역인재는 외면했고 공공기관장 인사에도 타지역과 민주당이 아닌 정당 출신들로 인사를 중용하는 행보를 보였다. 이 과정에서 지역인재는 외면했다는 비판에 직면했으며 도민 정서에도 맞지 않다는 불만소리가 도민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김관영 지사의 인사가 호스기들의 뒷담화 소재에 머물지 않고 연이은 비위와 불법 행위로 초대 정무수석이 음주운전으로 도중 하차했다. 또한 핵심 측근인 대변인은 대변인실에서 부정청탁과 광고비 부적정 집행 사건이 불거졌는데도 교통문화연수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며 사실상 측근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여기에 전북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적절하다는 채택에도 불구하고 끝내 공사 사장에 임명을 강행한 가운데 겨우 2달여 남짓 근무하다가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낙마하는 참사를 빚었다. 이 뿐만 아니라 민선 8기 도정 핵심 주요보좌직 자리는 타 지역 출신과 인척 등이 차지했다는 비판에 직면해 왔으며 인사실패는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지역 정가의 한 사람은 “선출직의 인사문제는 막중한 책임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권한 행사라고는 하지만 인사정책이 위임 권한 행사라는 합목적성에서 일탈하고 도지사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로 치우치게 되면 도정의 뿌리가 흔들리는 수 있다”며 “인사는 민사라는 말로 참혹한 결과는 도민들의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혐오씨(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는 “인사권은 아무리 도지사의 권한행사라고는 하지만 도민의 정서와 관계없이 임명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고 이에 대한 적절성 여부에 관심을 두고 실시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검증기관에서 제대로 검증되지 않는 인사를 중용하는 것은 인사정책 실패를 가져와 각종 국책사업들을 망치는 결과를 초래해 결국 도정의 실패라는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권한 행사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국민 82.7%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찬성”

도, 올림픽 유치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보고회
비용편익분석 결과 1.03 도출... “경제적 타당성 있다”
스포츠과학원 국민 인식조사 결과 여론 지지도 ‘탄탄’

전북특별자치도가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경제성이 입증되고, 10명 중 8명 이상의 국민으로부터 높은 지지를 확보하면서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탄력받게 됐다.

도는 26일 ‘하계올림픽 유치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비용편익분석(B/C) 결과가 1.03으로 도출됐다고 밝혔다. B/C 분석은 사업으로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뒤 총편익을 총비용으로 나눈 비율로 1 이상이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이번 조사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6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인 한국스포츠과학원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10개월간 수행한 법정 절차다. ▶2면에 계속 /이만호 기자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새만금



전주매일 캠페인